도구적 지식과 지식인의 도구화: 대학·자본·권력의 '삼각동맹'론을 중심으로

손석춘*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국의 대학은 '취업준비 학원'으로 도구적 지식을 생산할 뿐이라는 대학생들의 비판과 '21세기 인류사회를 선도할 지식'을 생산한다는 대학 총장들의 다짐이 충돌하고 있다. 대학의 지식생산을 바라보는 두 시각은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없이 평행선을 달리며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이 논문은 두 시각 사이에 소통을 위해 연구문제를 두 가지로 설정했다. 첫째, 대학은 권력-자본과 삼각동맹을 형성하고 도구적 지식을 생산하는가? 둘째, 대학이 생산해야 할 바람직한 지식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연구결과 한국 대학은 삼각동맹을 형성하고 도구적 지식을 생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근거해 폭넓은 지식의 소통이 필요하다. 근대 대학의 창시자인 훔볼트의 말처럼 대학이 '교수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 공동체'라면, 대학이 자본의 도구적 지식을 생산한다는 비판 앞에 학자들의 성찰과 학계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지식인의 도구화는 학자들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키워드 : 도구적 지식, 삼각동맹, 경향, 자본주의 다양성

* 2020gil@hanmail.net

1. 문제제기: 지식생산의 두 시각

대학의 죽음, 학문의 죽음을 진단하는 담론이 퍼져가고 있다. 2013년 12월 ‘안녕들하십니까’ 묻는 고려대 재학생 (경영대) 주현우의 대자보에 공감하는 대학생들은 바로 그 학교 그 학과를 2010년에 자퇴한 김예슬이 대자보를 붙일 때보다 크게 늘었다. 김예슬은 학교를 자퇴하며 대학과 권력, 자본을 ‘삼각동맹’으로 비판했다. ‘안녕들하십니까’는 그 연장에서 대학생들의 ‘고통’에 감성적으로 다가선 대자보다.

주현우의 대자보가 철도노조 파업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에 무심한 대학생들의 ‘안녕’을 물으면서 대학가에 걸린 대자보는 열흘 만에 1,200여 장을 돌파했다.¹⁾ 대학생들 사이에 대학에 대한 절망의 담론이 공감을 얻어가고, 이미 김예슬이 자퇴를 선언하며 지식의 도구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대학이 변화할 전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을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들은 대학생들이 제기하는 ‘도구적 지식 생산’과 ‘대학의 죽음’에 전혀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퇴생 김예슬과 재학생 주현우의 대자보가 붙은 대학의 교수들이 두 학생의 주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공식 표명한 글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 총장과 경영대학장이 대학을 운영하는 틀은 두 사람이 대학 사이트(site)에 공표해놓은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대 김병철 총장은 “지혜로운 글로벌 리더양성과 신지식 창조를 주도하는 대학”을 강조하며 ‘세계 일류대학’을 다짐했다(김병철, 2012). 주목할 것은 두 학생이 다닌 경영대학이다. 이두희 학장은 “국내최고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고의 경영대학이라는 오늘의 위상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 명문 경영대학을 향해 비상할 것”이라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게 될 진정한 글로벌 경영리더”라는 “원대한 꿈의 날개”를 펼치라고 독려했다(이두희, 2013).

1) 이연희·이재 (2013. 12. 20). 대학가 21C 대자보 열풍. 「한국대학신문」.

비단 고대만이 아니다. 한국의 최대기업인 삼성이 소유한 성균관대 총장은 “글로벌 리딩대학이 21세기 국가와 인류사회를 선도할 창조적 인재양성과 지식창출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준영, 2011). 대학 총장과 학장들의 공식 언명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은 ‘신지식 창조’와 ‘21세기 국가와 인류사회를 선도할 지식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대학의 지식생산에 대한 대학 총장·학장들의 ‘자부심’과 실제로 그 지식을 ‘전수’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자괴감’은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대학 총장·학장들의 언술에 담긴 논리로 추정하면, 대학을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들에게 김예슬이나 주현우를 비롯해 대학가에 열흘 동안 게시된 1,200여 장의 대자보는 주목해야 할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아니라 변화해가는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의 ‘치기’ 차원으로 해석됐을 가능성이 높다. 두 학생이 제기한 문제가 교수사회에서 적극 논의되지 못한 이유도 같은 문맥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식 생산을 놓고 대학 안에 존재하는 두 시각이 앞으로도 평행선을 그으며 점점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커뮤니케이션이 막힌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의 위기, 학문의 위기를 진지하게 짚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2. 연구 문제와 연구방법

학문과 지식인에 대한 비판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학문 초창기부터 지식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를테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며 거리로 나선 계기는 당대 학자들의 무지를 간파한 직후였다. 그 뒤로도 역사 전개과정에서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은 끊어지지 않았는데, 역설이지만 바로 그렇기에 지식생산의 건강성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20세기 후반에도 지식인 비판은 활발했다. 실존주의 철학으로 한국

전쟁 이후 대학가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장 폴 사르트르(Sartre, 1965/1999, 10~11쪽)는 지식인에 대해 “본질적으로 무력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전혀 생산하지 않으며, 기껏 봉급에 의존하여 먹고 사는” 존재라고 꼬집었다. 사르트르는 중세 서유럽에서 상공인들이 출현한 이후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그런 전통이 점점 실용적인 전문가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한국 사회에서도 1960년대부터 30년 가까이 지속된 군부독재 아래 ‘어용지식인’이라는 말이 대학가 안팎에서 종종 쓰였다. 1960년대~1980년대에 대학은 ‘어용교수’와 함께 ‘우골탑’이라는 말을 들었다. 따라서 새삼 대학의 죽음, 학문의 위기를 거론하는 담론을 언제나 있었던 불만 또는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2010년대 대학과 학문에 대한 비판 담론에는 세 가지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1987년 6월대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은 뒤 사라졌던 ‘어용지식인’에 대한 비판이 거의 사반세기 만에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10년대인 지금은 ‘어용’이라는 말만 직접 쓰지 않을 뿐, 대학이 대학 생들을 체제에 순응하도록 길들이고 있다는 비판의 성격은 동일하다. 다만, 과거와 달리 정치권력을 해바라기하는 ‘어용’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둘째, 과거의 대학과 학문 비판이 정치적 정당성 없는 군부독재와 손잡은 일부 교수들을 겨냥했다면, 2010년대의 비판은 권력과 자본, 대학이 ‘삼각동맹’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처럼 특정 교수 몇몇을 어용으로 지목한 게 아니라, 대학이 삼각동맹의 하나로 도구적 지식을 생산한다는 대학 전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셋째, 대학 전반에 대한 비판이라는 특성 때문에 비판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호명되지 않음으로써 대학에 몸담은 대다수 학자들이 둔감하다. 여기서 ‘둔감’은 반응적 행위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대학이 권력·자본과 삼각동맹을 형성하고 그 체제에 순응하도록 길들이므로써

학문의 전당 아닌 ‘취업의 전당’이 되었다는 대학생들의 비판에 학문적 관심이나 대응도 찾아보기 어렵다.

세 가지 특성으로 인해 대학 안에서 대학의 위기와 학문의 위기에 대한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과 일부 교수들이 ‘도구적 지식 생산’에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대학총장과 학장들을 비롯해 대학을 운영해나가는 현실적 주체들은 ‘인류사회를 선도할 지식창출’을 자임 또는 자부하고 있다.

이 논문은 평행선을 긋고 있는 두 흐름 사이에 불거지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연구역량에 한계도 있거니와, 그 해결이 과연 논문의 장에서 가능할가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두 흐름 사이에 생산적 소통을 위해서는 물론, 한국 대학과 학문의 미래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위해 최소한 짚어야 할 문제를 두 가지로 간추리고 그 문제를 탐구하는 것으로 연구를 한정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두 흐름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문제 1. 대학은 권력·자본과 삼각동맹²⁾을 형성하고 도구적 지식을 생산하는가?

연구문제 2. 대학이 생산해야 할 바람직한 지식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최소한 짚어야 할 문제’로 설정했지만 두 연구문제의 탐구 영역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구대상과 자료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선 서울·연세·고려대 세 대학의 일상적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학총장들이 대학을 운영하는 논리를 분석하고 그것을 김예슬과 주현우를 비롯한 대학생들의 대자보 논리와 비교했다.

대학의 도구적 지식 생산과 바람직한 지식의 패러다임을 연구하면서

2) 권력·자본과 대학의 ‘삼각동맹’이라는 말은 단순한 저널리즘 용어가 아니다. 대학 자퇴생 김예슬도 주장했지만, 교수로 재직하며 계간 『문화과학』에 관여해온 이득재도 ‘삼각동맹’을 비판했다(이득재, 2008, 164~168쪽).

서울·연세·고려대 총장들로 연구대상을 한정된 것은 이른바 ‘명문대’라는 사회적 평가에 동의해서가 결코 아니다. 대입 수능시험의 성적을 중심으로 ‘객관적’ 순위가 형성된 ‘명문대’라는 용어는 학술적 개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연구자는 그 사회적 ‘통념’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대학의 문제점이 가장 집중된 대학이라고 보았기에, 연구대상을 세 대학으로 한정했다. 실제로 대자보를 쓰고 자퇴함으로써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학생 세 명이 각각 고대생 김예슬(2010년 3월), 서울대생 유윤중(2011년 10월), 연대생 장혜영(2011년 11월)이라는 사실도 고려했다.³⁾

연구문제인 ‘삼각동맹’이나 ‘도구적 지식’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이론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이다. 비판이론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데 괄목할만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고, 이성이 ‘목적에 합당한 수단을 계산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도구적 지식생산’의 문제를 일찍이 제기했다.

특히 비판이론 1세대 학자인 호르크하이머(Horkheimer, 1947/2006, 218쪽)는 ‘도구적 이성’을 개념화하면서 “이성이 인간에 의해 인간적 자연과 인간 외적 자연을 지배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이래로, 진리를 발견하려는 이성의 고유한 의도는 좌절되었다”고 분석했다.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계몽의 기획은 형식화되고 도구화된 주관적 이성의 전면화로 발전했으며, 이로부터 현대 문명의 위기가 등장했다. 유용성 이외의 어떠한 객관적 원칙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구적 이성은 억압적 현실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구적 이성은 지배적 이익에 쉽게 굴복하며, 비합리적인 억

3) 대기업이 대학을 인수한 성균관대와 중앙대도 도구적 지식생산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 논문의 문제제기에서 성대 총장의 대학관을 언급한 이유이다. 다만 이 논문은 도구적 지식생산을 대학과 자본·권력의 ‘동맹’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했기에 대기업에 직접 ‘편입’된 두 대학은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대학을 인수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가볍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이 논문과는 별개로 ‘기업과 대학’에 대한 집중된 연구가 필요하다.

압적 현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현실에 적응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다 (Horkheimer, 232쪽). 학생들의 대자보 논리 분석에 비판이론이 적합한 이유가 여기 있다. “사물의 참된 본성을 파악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칙들로 확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이성 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 졌다”(Horkheimer, 36쪽)는 언술은 대학총장들의 논리 설명에도 이론적 유용성을 갖는다. 호르크하이머가 아도르노와 함께 쓴 『계몽의 변증 법』에서 “계산 가능성과 유용성의 척도에 들어맞지 않는 것은 계몽에게 는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분석한 대목도 마찬가지다(Adorno & Horkheimer, 1947/2001, 25쪽).

하지만 이 논문의 연구문제를 탐구하는 데는 비판이론을 적용하지 않았다. 비판이론이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서는 아니다.⁴⁾ 비판이론으로 연구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대학 내부에 평행선을 긋고 있는 두 시각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이 논문의 문제의식에 적합하지 않거니와, 서구 자본주의를 대상으로 분석한 비판이론이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데 꼭 들어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세 총장의 논리가 근거한 지식기반사회 이론에 대해서도 이 논문은 마르크스주의적 시각과 달리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식기반사회’를 처음 제기한 다니엘 벨(Daniel Bel)이 언급한 지식 개념을 받아들인다. 그가 제시한 ‘지식’ 개념, 곧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적 결과를 제시 하는 사실이나 개념에 관해 조직화한 진술의 집합체로서 어떤 체계적인 형태로 전달매체를 통하여 제3자에게 전달되는 것”(Bell, 1973, 176쪽)이 지닌 중요성은 현대 사회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지식생산이 중요한지 아닌지에 있지 않고, 어떤 지식 인가에 있다. 벨의 지식개념 위에서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지식생산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는 데 ‘자본주의의 다양

4) 기실 비판이론을 곧장 마르크스주의와 연결 짓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다. 비판이론 가 가운데 하버마스만 보더라도 그의 의사소통 이론이나 공론장 이론 모두 마르크스주의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성’(Varieties of Capitalism, VOC)을 이론적 틀로 삼았다. VOC 이론은 2001년 소스키스(D. Soskice)가 ‘자유시장경제’(LME)와 ‘조정시장경제’(CME)를 비교한 연구를 발표한 뒤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Hall & Soskice, 2001).

지식기반사회 이론과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토대로 이 논문은 연구문제1에서 세 대학의 총장들과 대자보 학생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교 분석한 뒤, 연구문제2에서 한국 대학의 지식 생산 방향에 대해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는 순서로 구성됐다.

3. 대학은 ‘삼각동맹’의 도구적 지식을 생산하는가?

1) 큰 배움도 큰 물음도 없는 대학

대학과 학문이 죽었다는 비판은 비단 대학생들만의 ‘대자보 논리’가 아니다. 김예슬과 주현우가 다니던 대학에서 생활했던 한 학자가 대학을 ‘지식생산의 공장’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글은 한국 대학의 현실을 ‘낯설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박노자는 “대학교라는 지식경제의 한 중요한 공장”에 대해 고려대 정교수의 ‘평균 연봉 1억 5,468만 원’과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비교한 뒤 “시간강사에 대한 초과착취로 얻어지는 잉여”가 전임교수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박노자, 2013).

한국에서 비정규직 교수로 있다가 노르웨이 대학으로 건너간 박노자의 주장에 정규직 교수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더구나 저널리즘에 기고한 박노자의 글을 인용해 정교수와 시간강사의 임금격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학술지 논문에서 ‘금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도구적 지식 생산의 문제를 온전히 다루려면, 지식을 생산하는 교수 사회의 은폐된 현실 — 그래서 불편할 수 있는 — 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교수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 차별적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일반 전임교수들은

망각하기 십상이기에 더 그렇다. 비정규직 시간강사— 그들이 바로 학문 후속세대다—와 정교수 사이에 임금격차가 10배가 넘는 현실은 대학조직답지 않은 차별로 전임교수들이 앞장서서 풀어야 할 문제다.

박노자의 언술에는 선부른 판단도 있다. 그는 대학에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하는 주체’는 더 이상 학생들도 아니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라고 주장했지만, 비정규직 교수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도구화된 지식생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노자가 거론한 고대에서 비정규직 교수로 강의해온 김영곤은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4년 1월 현재, 7년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영곤(2013)은 시간강사가 전임교수가 되는 병목을 거치려면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대학에서 비판이 사라져간다고 분석한다.⁵⁾

심지어 대자보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를 붙이고 자퇴한 김예슬(2010)은 자신이 몸담았던 대학을 서슴없이 ‘적’으로 규정했다.

“이제 나의 적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이 또한 나의 적이지만 나만의 적은 아닐 것이다. 이름만 남은 ‘자격증 장사 브로커’가 된 대학, 그것이 이 시대 대학의 진실임을 마주하고 있다. 대학은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가 되어 내 이마에 바코드를 새긴다. ... 큰 배움도 큰 물음도 없는 ‘대학’(大學) 없는 대학에서,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물을 수 없었다. 우정도 낭만도 사제 간의 믿음도 찾을 수 없었다.”

김예슬은 대학을 ‘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를 묻는 기자 질문에 삼성

5) 김영곤의 천막농성에는 역시 비정규직 교수이자 아내인 김동애가 동참하고 있다. 김영곤은 전임교수를 100% 충원하고 강의실의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간강사의 교원지위가 회복되면 “강사와 학생 사이에 쌍방향토론수업이 가능해 대학생의 학습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지금처럼 학점스펙에 매여 전문직과 대기업 정규직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이를 실현할 일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영곤, 2013).

이건희 회장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가 수여되는 것을 막으려던 학생들이 출교당한 사건과 경영대 ‘이명박 라운지’에 앉아 신문에서 ‘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읽었던 ‘사건’을 들었다. 김예슬은 비단 고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대학이 기업의 가치관을 부추기고 그 탐욕에 활짝 열려도 좋은 것인지를 물었다(『경향신문』, 2010년 4월 14일자).

김예슬 선언이 나오고 교수들은 공식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일주일 뒤 ‘교수님들의 양심을 묻습니다: 김예슬 선언엔 왜 침묵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붙었다(심해린, 2010). 대자보는 “존경받는 교수님이라는 직위는, 월급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추궁하고, 언제까지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고통 받는 청년들을 외면할 셈이냐고 물었다. 수많은 교수들이 시장만능주의에 경종을 울리며 ‘인문학의 위기’를 외쳤음에도 정작 그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에는 왜 침묵하느냐는 물음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⁶⁾

서울대 사회과학대 재학생 채상원은 ‘오늘 나는 대학을 거부한다. 아 니 싸움을 시작한다’ 제하의 대자보에서 대학을 “본격적 무한경쟁의 닫힌 공간일 뿐이며 그 공간은 우리에게 그 어떤 삶의 의미도, 방향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머니투데이』 2010년 3월 30일자).

대자보가 잠잠해진 2013년 12월에 주현우가 다시 대자보를 썼고 대학가에는 ‘대자보 열풍’이 불었다. 주현우는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진의 ‘떡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내놓은 하 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라고 물었다.

대학이 사회에 무심하다는 주현우의 감성적 문제제기는 급속도로 퍼

6) 대자보를 쓴 ‘이화여대 07학번 심해린’은 대자보를 쓴 심경을 “대학생들은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정작 이 문제에 대답해야 할 학교가, 또 교수님들이 모두 침묵”해서라고 밝혔다.

져갔다. 전국 대학에 대자보가 1,200장이 걸린 열흘 동안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커뮤니티 페이지는 한국에서 페이스북이 열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공감대를 넓혀갔다.⁷⁾

2) 서울·연세·고려대 총장의 논리

도구적 지식생산으로 ‘자격증 브로커’가 된 대학과 인류를 선도하는 지식 창조의 ‘글로벌 대학’이라는 기호처럼 현실을 바라보는 대학생과 대학총장 사이의 깊은 캐즘(chasm)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총장들의 대학관을 자세히 분석해보아야 한다.

대학생들이 도구적 지식생산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⁸⁾를 했는데도 대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학사를 관장하는 주체들의 논리에 학생들의 주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연세·고려대 총장들이 대학현실을 인식하는 논리는 무엇보다 총장들이 대학사이트에 게시한 글에서 또렷하게 나타난다.

서울대 총장 오연천은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세계 우수대학들

-
- 7) 대자보가 처음 게시된 뒤 열흘째인 2013년 12월 20일 현재 ‘안녕들하십니까’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은 26만 2,532명이다. 소셜미디어 컨설턴트 유승찬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 숫자가 7만 7,000명이고, 지난 대선 당시 야권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21만 5,000명인데 이 경우도 2년에 걸쳐 모아진 숫자”라며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채 일주일 만에 26만 명의 좋아요가 모인 것은 한국에서 페이스북이 열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된 유례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안녕들하십니까’는 적어도 SNS 공간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뛰어넘는 관심과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주간경향』 1057호, 2013년 12월 31일).
- 8) 학생들만의 주장은 아니다. 고려대 강수돌 교수(경영학)는 ‘김예슬 선언’ 앞에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면서 “이 ‘불편한 진실’을 누가 까발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을 뿐, 사실 ‘자격증 브로커로써의 대학’이란 비판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하대 김진석 교수(철학)는 “대학은 창조적이지도 않은 비싼 교육의 대가로 졸업장을 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그나마 “과거에는 대학을 나오면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대졸자 주류 사회의 시스템이 굴러갔지만, 지금은 대학을 졸업한 다수가 실업 상태”라고 주장했다(「한국대학신문」, 2010년 3월 26일자).

이 대학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을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이자 “거센 도전에 직면한 엄중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연세대총장 정갑영도 대학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동시에 빠르게 변화한다고 본다. 고려대 총장 김병철도 세계는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변화는 예측불가능하고 동시다발적인 형태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예측불가능하고 동시다발적인 변화라는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세 대학의 총장들은 한목소리로 ‘위기의식’을 고취한다.

그렇다면 총장들은 ‘위기’를 맞은 대학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 오연천은 “능동적으로 미래 세계를 이끌고 개척하는 최첨단 연구와 교육”으로 지식생산을 강조한다. 정갑영은 “글로벌 시대의 도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한다. 김병철도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명실상부 세계 일류로 인정받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들이 사이트에서 공동체를 강조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과 대조적이다.⁹⁾ 더러는 그 대학들은 이미 ‘세계 명문’이 되어 있기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 최고의 명문’과 ‘세계 일류대학’이라는 기호에 나타나듯이 대학운영에 경쟁을 중시하는 한국 대학총장들의 인식논리와 사고체계다. 그들의 위기의식 또한 자칫 획일적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9) 예컨대 미국 하버드대 드류 파우스트 총장이 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짧은 문장에서 대학 안팎의 사람들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People make a university great, so whether you are a prospective student, current student, professor, researcher, staff member, graduate, parent, neighbor, or visitor, your interest and enthusiasm are valued and appreciated.”

세 대학의 총장들이 학자로서 신문에 쓴 칼럼, 인터뷰, 저서, 사회적 활동을 분석하면 그들이 강조하는 ‘글로벌 연구’와 지식 생산의 성격이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미국 대학에서 ‘재정관리’를 전공한 행정학 교수 오연천의 특이한 점은 정부 부처와의 친화성이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를 오가며 활동했다.¹⁰⁾ 맡은 일이 겹쳐 문제도 불거졌다. 공기업 민영화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일 때, 당시 민영화 대상이던 금융공기업 산업은행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산업은행이 지분매각 의사를 밝힌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도 맡고 있었다. 매각업체와 인수 의사를 밝힌 업체의 이사를 겸임하며 ‘민영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셈이다. 법조계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며 도의적 문제를 거론했다. 국회에서 공기업선진화특위 위원장 자격 문제에 질문을 받고 ‘심난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까지 언론에 포착됐다(『뉴시스』, 2008년 8월 11일자). 산업은행·두산중공업·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업기술연구회 등 4곳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데, 사외이사를 2개 이상 맡을 수 없도록 한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¹¹⁾ 정부와의 친화성 못지않게 기업과의 친화성도 나타난다.

10) 2007~2009년 지식경제부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2005~2009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 및 선임이사, 2008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2003~2007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2001~2003년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단장을 역임했다.

11) 오연천은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들에 대해 직무실적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인사보수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한국기술평가원 비상임이사인 자신의 직무수행을 평가하고 연임에 찬성했다. 이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경향신문』, 2008년 8월 8일자).

공기업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오연천은 민영화론자다. 이미 1999년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민영화 담당 자문관’을 역임했다. 가장 최근에 낸 저서 — 엄밀하게 말하면 저서가 아니다. 신문칼럼 모음집이다 — 에서도 그는 ‘강한 시장’을 강조했다(오연천, 2009).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귀국 이후 내내 교수로 재직한 정갑영의 특이한 점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과의 친화성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석좌 연구위원을 지낸 그는 총장으로 선임될 때 재단법인 ‘자유기업원’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자유기업원은 전경련이 돈을 대는 곳으로 사업목표의 첫 순위가 ‘여론형성’이다. 정갑영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전경련이 주는 상을 받았고, 2010년에 들어서선 한국경제신문사가 주는 ‘다산경제학상’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사의 대주주가 전경련임을 감안하면, 전경련과 그의 친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또 ‘한국 CEO포럼’이 발족할 때 학자로서 창립총회에 참여했다(『연합뉴스』, 2001년 6월 19일자). 포럼은 주주가치 증시,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창립 목표로 선언했다.

전경련과의 친화성답게 정갑영은 확고한 ‘민영화론자’로서 글을 써왔다. ‘민영화 왜 자꾸 미루냐’제하의 칼럼(『매일경제』, 2002년 10월 29일)은 민영화 이후에 가격이 상승한 사례를 든 민영화반대론자들에 대해 “사라진 보조금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민영화에서 유발된 것이 아니다. 보조금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른 사람이 엉뚱하게 부담한 부분”이라고 공박했다. 그는 이어 민영화로 ‘근로자의 후생’도 ‘고용규모’도 증가할 수 있다면서 실패사례에 집착하여 더 이상 본질을 왜곡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40여 일에 걸친 쟁의 끝에 합의를 이뤘을 때 정갑영의 논평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전경련은 현대자동차에서 합의된 노조의 경영참여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노조가 얻어낸 ‘경영참여’는 공장을 이전할 때나 노동자들을 해고할

때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¹²⁾ 정갑영은 전경련 논리를 적극 옹호한다. “노동시장의 개혁방향은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이번 현대차 노사협상은 유감스럽게도 반대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비판했다. 정갑영은 생산공장 이전 등 경영진이 정책을 결정할 때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이 시장 환경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매일경제』, 2003년 8월 6일).

정갑영은 전경련이 대학 총학생회 간부 경제교육에 1기부터 강사로 나섰다(『한국경제』, 2004년 1월 26일자). 전경련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내 여론을 주도하는 총학생회 간부들이 시장경제와 기업 활동의 중요성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반(反)기업정서를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4년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정갑영은 ‘이 불황에 경영인 구속해야 하나’ 제하의 시론(『조선일보』, 2004년 2월 27일)을 기고했다. 그는 2011년에 동아일보사 객원 논설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금융 위기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미국 안에서도 활발하게 나오던 시기였지만, 그는 공기업 민영화가 지지부진하다고 다그쳤다. 심지어 ‘공기업 선진화는 어디로 갔나’ 제하의 칼럼(『동아일보』, 2011년 3월 25일자)에서 “일본의 전기요금의 우리의 2.4배이고 미국도 1.4배라니 우리 전기요금 구조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 같다. 정부가 공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억누른 결과 아니겠는가. … 값싼 전기요금이 반드시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총장으로 재임하며 그런 칼럼들을 모아 『위기의 경제학』이라는 ‘저서’를 냈다(정갑영, 2012).

12) 전경련은 그 합의에 대해 “아무리 노사 간의 합의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민상법이 보장하는 기업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향후 그 해석과 운용에 있어 위헌 내지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경영자총협회도 “현대차 노조의 파업만능주의 행태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경영권 침해 조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산업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독소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과 깊은 연관을 맺은 정갑영은 2004~2012년 한국수출입은행 경영자문위원, 2009~2010년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동시에 오연천에 버금갈 정도로 정부 부처 활동에 적극 나섰다. 통신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농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 전기위원회 위원,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총장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부터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 위원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연천과 정갑영 총장의 삶과 글을 분석하면, 김예슬이 왜 권력과 자본과 대학이 삼각동맹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김병철은 앞의 두 총장과 조금 다르다. 독일 대학에서 농학 학위를 받은 그의 특이점은 '가문'이다. 그는 고려대를 창립한 김성수의 손자다. 김성수는 동아일보사 창간도 주도했다. 현재 동아일보사 사장이자 고려대 재단 이사장인 김재호는 김병철의 조카다. 태생부터 자본에 친화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다만, 자연계열 학자이기에 인문사회계열 총장들과 달리 현실 문제를 언급한 공적 발언을 찾기 어렵고, 신문 칼럼을 모아 '저서'를 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총장이 된 직후에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그의 대학관을 파악할 수 있다.

신임 총장 인터뷰(『매일경제』, 2011년 4월 23일)에서 김병철은 세계적인 대학을 위해 학부부터 국적에 개방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가 생각하는 대학의 지향점을 짐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노하우가 있으므로 이를 ‘한국개발학’ 같은 학문으로 개발하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유학생들을 파견하고 윈윈이 가능”하다는 발언에선 그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재임 2년 뒤 인터뷰(『매일경제』, 2013년 6월 22일)에선 “(취임이후) 영어 강의 비율도 늘고 심지어 경영대는 교수회의도 영어로 한다던데”라는 기자 질문에 “10년 전만 해도 영어 강의는 전체의 10% 수준에 그쳤지만 지금은 35%에 달한다. 교원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총장이 된 후 새로 뽑은 교원 중 외국인이 26%

나 된다”고 자부했다.

김병철이 스스로 밝힌 ‘치적’은 앞서 인용한 대학생 채상원의 대자보가 “영어강의 확대, 상대평가제 등의 제도는 더욱 많은 것을 강요하고 무조건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며 이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커리큘럼,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획일화된 교육방식… 낙후한 교육관”이라고 비판한 대목과 대조적이다. 채상원의 대자보는 “새 사회의 동력을 창출할 수 없는 대학에서는 그 어떤 비전도 찾을 수 없다”며 수업내용과 수업방식에서부터 병든 대학사회의 본격적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대학 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한 대자보의 ‘결론’은 시사적이다.

3) 삼각동맹과 도구적 지식

세 대학 총장들의 삶과 글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정부와 기업에 깊은 연관성을 지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특정 시기 대학 총장들의 삶과 글로 그 대학 전체를 재단한다면 성급한 판단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세 대학 총장의 삶과 글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첫째, 세 대학은 총장을 선임할 때 대학구성원 특히 교수들의 의사를 반영한다.¹³⁾ 정부와 전경련에 친화적인 학자들과 재단창업자의 손자가

13) 서울대 총장은 사실상 직선제이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교수들의 선택과정을 거친다. 연세대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인준 대상자를 지명하면 교수들이 이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정갑영 총장은 이사회로부터 인준 대상자로 지명된 뒤 교수 직선투표에서 86.6%의 지지를 받아 총장직에 올랐다. 고려대도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고 총장 후보에 응모한 10명 중 예비심사 투표를 통과한 후보자 9명의 발전계획서 등을 검토해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총장 추천위는 각 단과대 대표 교수 15명, 재단 인사 4명, 교우회 인사 5명, 교직원 3명, 학생(안암 세종 캠퍼스 및 대학원 총학생회장)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에서 김병철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학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전반적 의사가 반영됐다고 본다면, 서울·연세·고려대 교수 모두는 분명 아니지만 적어도 다수는 총장의 삶과 글에 동의했거나 최소한 문제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세 대학 총장들의 말과 글은 개개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담론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자들이 그물망처럼 작동하며 발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역사적, 담론적 심층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총장 개개인의 판단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맥락에서 김예슬, 심해린, 채상원, 주현우의 대자보 내용을 촘촘히 짚을 필요가 있다. 대학을 삼각동맹의 하나인 ‘적’으로 규정한 사실엔 동의하지 않더라도 냉철하게 성찰할 문제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가 되었다거나 큰 배움도 큰 물음도 없는 ‘대학(大學) 없는 대학’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물을 수도 없었고 ‘사제 간의 믿음’도 찾을 수 없었다는 대학생의 판단은 근거 없는 ‘선동’인가?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고통 받는 청년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를 교수에게 묻는 대학생은 과연 뜬금없는 것인가? 인문학의 위기를 외친 수많은 교수들이 정작 지식의 도구화를 비판하는 학생들의 저항에 왜 침묵하느냐는 대자보는 지나치게 감정적인가? 대학이란 곳은 본격 무한 경쟁의 닫힌 공간일 뿐이며 그 공간은 우리에게 그 어떤 삶의 의미도, 방향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대자보는 침소봉대인가? 마을에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하고 자본과 경영진의 ‘먹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내놓은 수상한 사회에 대학은 침묵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가?

네 학생이 던진 문제를 한국 대학을 ‘대표’하는 세 대학의 총장과 그들을 총장으로 뽑는데 동의한 다수의 교수들이 진지하게 답하거나 최소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심해린(2010)은 ‘자유·정의·진리’, ‘진·선·

미’, ‘의에 죽고 참에 살자’와 같은 건학 정신은 버린 채 “대학을 취업학원으로 전락시킨 각 대학 총장님들”에겐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고 대자보에 썼지만, 교육자로서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필요의 차원을 넘어 의무이기 때문이다.

경영대 학장 이두희 — 2010년 총장 후보로도 ‘출마’했다 — 는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게 될 진정한 글로벌 경영리더’라는 원대한 꿈을 펼치라고 주문하지만, 그 대학 학생은 대자보를 붙이며 대학을 ‘적’으로 규정해 자퇴하고 그 학생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끊어지지 않는 대학의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소수이지만 ‘진보적 교수’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예슬 선언에 대해 “가장 진보적이라는 언론조차 이 의미를 알아채지도, 제대로 다루지도 않았다. 진리를 논하며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던 진보 지식인과 교수님들조차 거의 모두가 침묵했다. 몇몇 분들은 ‘거의 눈물 날 정도로 기뻐다’, ‘뒤늦은 성년식을 축하한다’며 좋은 소리를 하면서도 정작 교수적인 자신에 대한 성찰은 빠져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심해린, 2010).

대학은 삼각동맹의 도구적 지식을 생산하는가라는 연구문제1에 대해 지금까지의 분석에 근거해서 확정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대학이 정부 및 기업과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거나, 대학의 모든 지식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도구라고 단언할 근거를 찾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대학이 정부 및 기업과 논리를 공유하며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을 생산하는 경향(tendency)은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경향에 대한 비판은 교수들에 의해 간헐적이거나 제기되어 왔다.

이득재(2008, 165쪽)는 권력이 대학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해왔고, 궁극적 목적은 ‘기업 대학’을 만드는 데 있다며 국가·자본·대학을 삼각동맹으로 비판했다. 고대를 2008년 정년퇴임한 정치학자 최장집은 퇴임강연에서 “민주주의 발전에서 대학에 어떤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

며 대학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추동하는 본산이자 동시에 그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가 그대로 집중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경향신문』, 2008년 6월 21일자). 그는 대학의 외적 발전은 이미 세계적 수준을 넘어서 미국의 일류 대학에 비해 모자라지 않지만 내적 발전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며 무엇보다 “사회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매일경제』, 2008년 6월 21일자). 서울대를 정년퇴임한 경제학자 김수행도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 계급과 연관된 정치인, 공무원, 학자가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다”며 학자를 지배계급 형성의 주요 부분으로 보았다(김수행, 2013).

따라서 대학이 기업과 시장을 위한 도구적 지식을 생산하는 경향성에 대해 이제는 ‘대학 공론장’에서 적극 논의해가야 옳다. 그런 논의마저 없을 때 대학이 정부 및 기업과 논리를 공유하는 상황은 물론, 도구적 지식생산으로 인한 지식인들의 도구화 추세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4. 지식생산의 패러다임 전환

1) 신자유주의적 경쟁 패러다임 지양

대학이 도구적 지식을 생산하는 경향성이 뚜렷하다면, 지식기반 사회에서 바람직한 지식 — 여기서 지식은 다니엘 벨을 따라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적 결과를 제시하는 사실이나 개념에 관해 조직화한 진술의 집합체’로 정의한다 — 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 행정학자와 경제학자로서 각각 서울대와 연세대 총장을 맡고 있는 두 교수가 ‘공기업 민영화’를 시종일관 강조한 지식,¹⁴⁾ 전경련의 논리를 대

14) 공기업 민영화가 세계 곳곳에서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예컨대 영국 상수도사업이 민영화된 뒤에 수도 요금은 거의 50%나 올랐고, 요금을 내지 못한 2만 가구에 수도물 공급이 중단되었다. A형 간

변하며 ‘노동의 경영참여’를 비난해온 지식¹⁵⁾이 과연 얼마나 학문적 진실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정당성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학에 영어 강의를 더 늘리고 외국인 교수를 더 채용한 게 대학총장의 ‘업적’으로 과시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서울·연세·고려대 총장들이 세계 속의 ‘글로벌 대학’을 강조하는 상황이기도 그 ‘글로벌’이라는 개념에 담긴 ‘지식’부터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다. ‘글로벌 시대’라는 말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애용되고 있듯이, 실제로 글로벌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된 게 엄연한 사실이다. 20세기 말부터 몰아친 정보과학기술 혁명으로 지구촌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는 현상은 과거와 견주어 또렷하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1997년 IMF이후 신자유주의 체제가 뿌리내리면서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한층 커졌기에 세계적 흐름의 정확한 인식은 개개인에게 삶의 조건이 되었다.

문제는 세계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인식이 너무 빈곤하다는 데 있다. 일차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곧 ‘글로벌’로 여문화하는 신문과 방송 보도 때문이다. 김성해·심영섭(2010)은 한국인

업 발병은 몇 년 사이에 갑절로 늘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콜레라 전염병이 창궐했다. 결국 미국 애틀랜타, 프랑스 그르노블, 독일 포츠담에서 수돗물 민영화 실험은 중단됐고, 볼리비아 물 전쟁이 상징하듯이 시민의 저항으로 다국적 기업이 철수한 사례도 있다. 미첼 라이몬과 크리스티안 펠버는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어온 무분별한 민영화의 실체를 드러내며 피해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그들은 “건강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금으로 그 무게를 잴 수도 없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 굳이 경제학을 공부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관찰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경제학을 공부한 다음에는 건강이 다른 상품과 똑같은 물건이며, 따라서 자유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Michel Reimon, 2003/2010, 53쪽).

- 15) 현대자동차 노사합의에 대해 “경영권 침해 조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독일은 현대자동차 노사합의와 차원이 다를 만큼 높은 수준의 노사공동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을 재계가 펼 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학자가 오히려 그들의 논리를 강화해주는 발언을 한 것은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창문이라 할 수 있는 국제뉴스가 “간혀 있을뿐더러 국제 이슈를 비판적·종합적으로 읽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 언론에선 미국이 곧 국제 사회이고, 로이터와 AP가 취재하고 연합 뉴스가 번역해주는 기사만으로 국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언론의 ‘닫힌 창문’을 지적해야 할 대학이 오히려 그 ‘닫힌 논리’를 강화한다는 데 있다. 그 점에서 언론학의 책임은 다른 학문보다 크다. 한국 언론이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를 곧장 ‘글로벌 스탠더드’로 등식화하는 상황에서 신문과 방송에 대한 산업적 접근과 연구는 많았던 반면에, 언론의 ‘닫힌 창문’과 특정한 여론 형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적었다. 미디어 현상에 대한 도구적 접근은 전국종합일간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세 신문사에 종합편성채널을 주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로 활동했던 언론학자들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⁶⁾

세 대학 총장 오연천과 정갑영, 김병철의 현실인식과 학자적 실천 활동에서 나타나듯이, 그들에게 ‘글로벌’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와 등치된다. 오연천·정갑영과 달리 독일에서 학위를 받은 김병철까지 영어강의와 외국인교수 비율을 강조하며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가는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연구하면서 한국 사회의 공론장은 물론, 대학의 학문적 공론장마저 ‘티나(Tina)식 사고’(There is no alternative.)가 지배하고 있다. 다름 아닌 세 총장의 글과 말, 사회적 실천이 그 증거다. 공기업 민영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를 글로벌스탠더드로 여기고 대학 경쟁력에 몰입하는 대학총장들의 생각은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2012)나 폴 크루그먼(2012)이 신자유주의

16) 이명박 정부 시기에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의 경영진으로 ‘좌파 방송인 축출’을 과시 하듯 발언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자 한국방송의 사장을 임기 중에 사임하는데 앞장선 한국방송 이사장 모두 언론학자였다는 사실은 언론 못지않게 언론학자들이 권력의 도구가 된 사례다.

를 비판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스티글리츠(Stiglitz, 2012, 123쪽)는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개인적인 이익 추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만민의 행복을 창출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 위기를 거친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금융업자들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가 만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들의 이익 추구는 기껏해야 금융업자들의 행복으로 이어졌을 뿐이고,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에게는 희생을 안겼다는 것이다. 역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Krugman, 2012, 114쪽)은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미국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에서 17.1%로 증가했다면서, “그 말은 다른 조건이 그대로라면 그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소득 비중은 약 10% 줄어들었다는 뜻이라고 간명하게 비판했다.

요컨대 문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더 이상 ‘글로벌스탠더드’도 아니고, 신자유주의의 본산지인 미국에서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는 데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한국의 학계와 언론계는 여전히 ‘글로벌’의 의미를 ‘신자유주의식 경쟁체제’로 등식화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다.

2) 자본주의 다양성과 다양한 지식 소통

토마스 쿤(Kuhn, 1962)은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이론·관습·사고·관념·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를 패러다임으로 정의했다. 쿤에 따르면, 과학사의 특정한 시기에는 언제나 개인이 아니라 전체 과학자 집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모범적인 틀이 있다. 한국 언론계와 학계에서 미국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연구하는 것이 ‘정상과학’(normal science)처럼 받아들여져 온 것이 그 전형적 사례다.

한국 대학은 변화해가는 세계를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창조적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와 대학의 현실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이론적 기반은 ‘자본주의 다양성’(VOC)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제안에 “한국 사회와 대학의 현실에서”라는 조건을 붙인 이유는 명료하다.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이 21세기 들어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기에 세계적 차원에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없지만,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 미국식 정치경제 체제가 선진국으로 가는 ‘유일한 모델’로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소통되고 있는 한국 사회와 대학의 현실에는 패러다임 전환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학계가 VOC에 대한 연구에서 완전히 뒤쳐져있는 것은 아니다. 학계 일각에서 미국식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과 한국의 발전모델에 대한 논의가 개진되어 왔다. 이병천(2005), 이정우(2005), 조형제·정건화·이정협(2006), 김인춘(2007)의 연구가 그것이다. 그들의 연구에는 세계화가 경제와 제도를 신자유주의라는 하나의 모델로 수렴시킨다는 자본주의 수렴화 이론과 달리, 지역 또는 국가 사이에 자본주의의 다양성이 지속된다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대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지식 생산은 서울·연세·고려대 총장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를 ‘글로벌 기준’으로 전제하고 있다.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유형과 특징을 설명하는 이론(Hall & Soskice, 2001)으로,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스며들어 있지 않다. 경제체제의 다양성을 접근하는 이론적 갈래도 다채롭다. 가장 많이 알려진 이론은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구분이다(Hutton, 200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시장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자본의 구조적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제도화한다.

생산체제 (production regimes)를 중시한 학자들은 조정시장경제 (co-ordinated market economy, CME)와 자유시장경제 (liberal market economy, LME)로 유형화한다(Soskice, 1999). 시장경제체제를 중심에 놓고 사회적 시장경제와 자유시장경제로 구분하는 학자도 있다. 경제개방의

대응방식에 초점을 두고 이익집단조직 및 관료의 역할에 따라 자유주의적 대응방식, 국가주의적 대응방식, 코포라티즘 대응방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사회경제시스템을 영미모델, 시민주의모델, 동아시아모델, 유럽대륙모델, 남부유럽모델로 유형화(Amable, 2004) 하기도 한다. 일찍이 에스핑 안델센(Esping-Andersen, 1990)은 복지를 기준으로 선진 자본주의체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복지제도의 포괄성, 보편성, 관대성을 기준으로 한 탈상품화의 정도에 따라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보수적 복지국가, 자유주의적(또는 잔여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단일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한국 학계에선 지배적이지만, 다양성은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자유 시장경제가 더 신자유주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조정시장경제는 탈규제보다 오히려 자국 제도의 안정성과 비교우위성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인춘, 2007).

지금까지 언급했듯이 세계가 사회주의 체제 몰락 이후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단일화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부에도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식 모델을 유일한 선진 경제체제로 —의식했든 안했든— 전제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옳다.

신자유주의적 체제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전제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때,¹⁷⁾ 자본주의에도 다양한 정치경제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할 때, 한국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울 수 있다. 다양한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창조적 경제도 가능성이 열린다.

17) 한국의 지식생산에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논의는 김현철·류용재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김현철·류용재(2013)는 에덤 스미스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본래 존재하지 않았다며 ‘근대 이성론에 입각한 학문과 믿음의 체계’라는 패러다임에 변화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기실 자본주의의 다양성 이론 또한 자본주의에 대한 획일적 이해를 벗어나는 데서 출발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세력은 지구촌의 모든 나라를 ‘경쟁’으로 압박하며,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는 아무런 구실도 할 수 없고, 시장과 초국적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다양성이론에서 판단할 때 그것은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세계화의 압력에 따른 각국의 대응은 동일하지 않다.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연관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경제체제가 가능하다는 ‘지식’은 세계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국가 경쟁력과 무관한 논의가 아니다. 오히려 ‘지식기반 경제’가 보편화해가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세계화 시대에 여러 국가의 경쟁력은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성과 경쟁력(performance competitiveness) 만이 아니라 구조 경쟁력(structural competitiveness)을 포함한다(신동면, 2004).

따라서 세계화의 압력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치경제 체제가 영·미식의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식을 폭넓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만이 세계화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논리, 또는 그것만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논리 모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화라는 압력 앞에서도 개별 국가들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는 기존의 관료 주도의 경제성장모델과 신자유주의모델¹⁸⁾로 풀

18)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관료주도모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약화되면서 1997년의 외환위기를 맞았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은 국가기구가 자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고, 국가정책의 사회적, 민주적 기반을 확립하지 못하였다. 이병천은 시장 자유화로 발전모델의 부분적 전환이 ‘재벌이익에 부합되는 신자유주의적 국가’로 귀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이병천, 2005). 특히 경제위기 직후 —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지만 — 한국 경제는 영미형 자유시장경제(LME) 체제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IMF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시장에 순응하는 체제로 변화했다.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로 인한 갈등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와 다르다고 해서 유럽식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는 것 또한 주체적인 태도가 아닐뿐더러 현실에 적용 가능성도 적다. 바로 그렇기에 한국 사회에 대한 과학적 현실분석을 밑절미로 새로운 정치경제 체제를 구상하는 국내 싱크탱크들의 연구 성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 체제가 보편화하면서 2005년부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 희망제작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비롯한 싱크탱크들이 대학 밖에서 출범했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대안적 정책의제를 제시해왔다. 대학이 도구적 지식 생산에 매몰되어갈 때 대학 밖에서 창조적 지식 생산이 이뤄져온 셈이다.¹⁹⁾

경제체제의 다양성과 정치경제의 연관성을 중시해서 세계화를 탐구하면, 경제를 비롯한 정치·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와 관련해 이미 여러 나라에서 현실화한 정책과 지식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

이를테면 2013년 현재 한국 사회의 큰 쟁점인 부익부빈익빈이나 청년 실업의 문제들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2012년 대선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약한 ‘경제 민주화’의 구체적 정책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와 같은 지식들은 대학생은 물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경제문제와 관련한 지식만이 아니다. 왜 그 나라들에서는 ‘입시 지옥’이 없는지, 왜 노동시간이 우리와 견주어 큰 차이가 있는지, 청소년과 노동자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교육 문제와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진국 정책’이 필요한지도 대학생과 사회구성원들이 두루 알

19) 가령 새사연은 1960년대 정부주도모델, 1997년 이후 자본주도 모델과 다른 ‘노동중심모델’을 제시했고, 그것을 하부구조로 ‘주권 민주주의’를 구상했다(손석춘, 2014).

고 싶은 지식이다. 아니, ‘알 권리’가 있는 지식이다.

이 논문은 유럽의 복지국가 정책을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도입하자거나 주주자본주의보다 이해관계자본주의가 더 좋다는 차원의 논리를 전개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가치 판단 이전에 자본주의 정치경제 체제가 다양하다는 사실에 관한 지식, 자본주의로 운영되는 나라들에서 한국인의 일상과 사뭇 다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지식이 한국 대학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폭넓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 대안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상력을 넓히고 창조적 지식 생산을 북돋울 수 있다.

벨이 정의한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적 결과를 제시하는 사실이나 개념에 관해 조직화한 진술’들을 광범위하게 소통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선입견 또는 편향성이 있을 때,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경제 체제의 다양성과 정책대안들에 대해 지식을 공유하고 그 다채로운 지식들을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창의적 지식이 생산되는 선순환을 이룰 때, 그때 비로소 한국 대학은 도구적 지식 생산 경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갈 수 있다.

5. 결론과 제언

‘세계 일류대학’으로 ‘인류사회를 선도할 지식’을 생산한다는 대학 총장들의 다짐과 ‘취업 브로커’로 도구적 지식을 생산할 뿐이라는 대학생들의 대자보 선언에 확연히 드러났듯이, 대학의 지식생산을 바라보는 두 시각은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두 시각 사이에 소통을 위해 이 논문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대학은 권력-자본과 삼각동맹을 형성하고 도구적 지식을 생산하는가? 둘째, 대학이 생산해야 할 바람직한 지식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연구결과, 한국 대학은 삼각동맹을 형성하고 도구적 지식을 생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근거해 다양한 지식의 생산과 폭넓은 지식 소통이 필요하다. 근대 대학의 정신을 확립한 훔볼트(Humboldt)의 말처럼 대학의 이념이 ‘교수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 공동체’라면, 대학이 자본의 도구적 지식을 생산한다는 대자보 앞에 학자들의 성찰이 필요하다.

새삼 강조하지만 자본주의 다양성에 근거한 풍부한 지식들의 소통과 융합은 기존의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의 문제로 바라볼 의제가 아니다.

서울·연세·고려대 총장을 비롯한 그의 선임에 찬성한 다수 교수들에게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근거한 폭넓은 지식의 소통을 주장하는 것은 ‘좌파’로 보일 수 있고, 반면에 마르크스 연구를 꾸준히 해나가는 몇몇 학자들에게는 ‘우파’ 개량주의로 보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렇기에 VOC는 지식을 생산하고 소통하는 데 적합한 연구기반일 수 있고, 한국 대학의 갈등을 풀어가는 이론으로 ‘유용’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지식생산에 대한 대학 안의 두 시각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했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더 정교한 논의,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세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경향에 대한 경계다. 대학이 권력·자본과 삼각동맹을 형성하고 도구적 지식을 생산한다는 비판에는 대학에 몸담고 있는 학자들 대 다수가 선뜻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경향이 서울·연세·고려대 총장들이 교수로서 걸어온 길과 글을 분석해보면 나타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그럴 의도가 없다면, 세 대학 총장들과 대학사회에 성찰이 필요하다. 훔볼트가 ‘대학 정신’을 강조하며 직업적 유용성을 앞세우는 계몽주의적 교육을 비판하고 권력과 일상성으로부터 해방된 공동체를 모색(이광주, 2008, 48쪽) 한 이유, 훔볼트 이후 대학의 이념이

‘고독과 자유’로 존중받아온 이유를 짚어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 다양성에 근거한 다양한 지식의 소통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가 보편적인 자본주의 체제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유일한 자본주의 체제라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전제하는 경직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자연과학적 지식과 달리 인문사회과학의 지식은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은 삶을 전망해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라는 특정한 패러다임에 맞춰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특정한 틀의 논문 형식에 맞춘 양적 지식생산을 ‘독려’해온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지식기반 사회’론에 비춰보아도 지식 생산과 소통은 다양하게 펼쳐져야 한다.

셋째, 대학에 점점 커져가는 조선·중앙·동아일보사의 ‘영향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실천이다. 언론시장을 독과점한 세 신문사는 단순히 보수성향의 언론이 아니라, 저널리즘 원칙에 어긋나는 보도와 논평을 무시로 해왔다. 각각 종합편성 채널을 확보한 뒤 폐해는 더 심각하다(손석춘, 2011). 무엇보다 그 신문들이 대학을 평가하며 사실상 줄 세우는 현실은 학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그 지탄에 동의하든 않든 엄연한 사회현상이다—언론사가 학문의 건강성까지 위협한다면, 시대적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학자가 ‘독과점 언론’의 문제를 비판해야 할 때 오히려 그들의 논리를 강화하는 칼럼 기고글 ‘명예’나 ‘사회참여’로 인식한다면, 언론과 대학의 미래는 모두 어둡다.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대학이 도구적 지식의 생산기지로 변해가는 경향은 교수와 학생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흐름이다. 대학가에 열흘 동안 걸린 1,200여 장의 대자보는 한국 대학에 울린 ‘경보음’이다. 더 늦기 전에 도구적 지식생산과 지식인의 도구화를 학문의 공론장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숙의할 때다.

참고문헌

- 김병철 (2012. 9. 2). 지혜로운 글로벌리더를 양성하는 세계적 대학. 고려대 사이트 총장실. http://www.korea.ac.kr/content/K/K1_1.jsp
- 김성해·심영섭 (2010). 『국제뉴스의 빈곤과 국가의 위기』.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수행 (2013. 9. 13). 마르크스는 미래 사회의 무엇을 보았는가. 『르몽드디플로마티크』, 60호.
- 김영곤 (2013. 7. 16). 강사교원지위회복이 대학생학습권을 키운다. 『21세기 대학뉴스』.
- 김예슬 (2010).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느린걸음.
- 김인춘 (2007).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조건. 『한국사회학』, 41권 4호, 202~241.
- 김준영 (2011. 2. 9). 글로벌 리더대학의 새로운 지평. 『대학교육』, 제170호.
- 김현철·류용재 (2013). 글로벌 경제위기의 인문학적 해석. 『커뮤니케이션이론』, 9권1호, 39~77.
- 박노자 (2013. 7. 11). 희망버스를 타려는 의미. 『미디어오늘』.
- 손석춘 (2014). 『무엇을 할 것인가』. 시대의창.
- _____ (2011). 한국의 미디어집중과 여론 다양성의 위기. 『한국언론정보학보』, 56호, 7~25.
- 신동면 (2004). 『세계화시대 자본주의체제의 다양성』. 미래전략연구원.
- 심해린 (2010. 3. 17). 교수님들의 양심을 묻습니다. 『오마이뉴스』.
- 오연천 (2009). 『강한 시장, 건강한 정부』. 올리브 (M&B).
- 이광주 (2008). 『대학의 역사』. 살림.
- 이두희 (2013). 국가와 인류발전을 위한 글로벌 경영 리더 양성. 고려대 사이트 경영대학. <http://biz.korea.ac.kr/listener.do?layout=INTRO.intro01>.
- 이득재 (2008). 『대한민국에 교육은 없다』. 철수와영희.
- 이병천 (2005). 자유화, 양극화 시대의 무책임 자본주의: 사회통합적 시민경제의 대안. 『아세아연구』, 48권 3호, 43~71.
- 이정우 (2005). 양극화냐, 동반성장이나. 『시민과세계』, 7호, 109~127.
- 정갑영 (2012). 『위기의 경제학』. 21세기북스.

조형제 · 정건화 · 이정협 (2006). 신진보주의 발전모델과 민주적 발전국가의 모색. 『동향과전망』, 67호, 58~92.

Adorno, T. & Horkheimer, M. (1947). *Dialektik der Aufklarung*. 김유동 역 (2001).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 지성사.

Amable, B. (2004). *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 Press.

Bell, D.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Hall, P. & Soskice, D.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Oxford: Oxford Uni. Press.

Horkheimer, M. (1947). *Zur Kritik der Instrumentellen Vernunft*. 박구용 역 (2006). 『도구적 이성 비판』. 문예출판사.

Hutton, W. (2002). *The World We are In*. New York: Little Brown.

Krugman, P. (2012). *End This Depression Now!*. 박세연 역 (2013).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엘도라도.

Kuhn, T.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김명자 역 (2002). 『과학혁명의 구조』. 까치글방.

Reimon, M. & Felber, C. (2003). *Schwarzbuch Privatisierung*. 김호균 역 (2010).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민영화 그 재앙의 기록』. 시대의 창.

Sartre, J. P. (1965). *Plaidoyer pour les intellectuels*. 조영훈 역 (1999). 『지식인을 위한 변명』.

Stiglitz, J.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이순희 역 (2013). 『불평등의 대가』. 열린책들.

투고일자	2014년 1월 16일
심사일자	2014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2월 24일

Abstract

Instrumental Knowledge and Instrumentalization of Intellectuals

Seok-Choon Shon

Professor, Dept. of Media Communication, Konkook University

There are serious conflicts of opinion in universities in Korea between university presidents who view a university as a global leader and students who consider it as only an institution for employment preparation. Is it truly impossible to overcome the difference of two viewpoints on the knowledge production of universities?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se two viewpoints running parallel line without a point of contact, this paper brings up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do universities produce instrumental knowledge forming a triangle alliance with power and capital? Second, what is the desirable paradigm of knowledge that universities should be responsible for? As a result of research,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universities in Korea produce instrumental knowledge forming a triangle alliance, however, it clearly shows that they have such tendency. Therefore, it is crucial to have broad communications of knowledge based on 'Varieties of Capitalism'. Scholars' introspection is required before the criticism that universities are producing the instrumental knowledge of capital if a university is 'a liberal and equal community for learning consisting of professors and

students' as Humboldt, a founder of modern university, defined. Instrumentalization of intellectuals is not desirable not only for scholars themselves but also for the nation.

Key words: instrumental knowledge, triangle alliance, tendency,
Varieties of Capitalism